

‘법적으로 동포인데 복지는 제외’…제도 밖 고려인들

코로나·소비쿠폰 등 지원 배제
비자 취득 불구 주민등록 없어
건강보험·현금성 지원 못 받아
국내 거주 동포 위한 법령 미비
“국적”보다 ‘실질 주민성’ 기준

지난 2019년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려인 4세대까지 ‘재외동포’로 인정받게 됐다. 제도적 진전이었지만 고려인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체류 자격을 갖췄어도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주요 복지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는 약 4800명의 고려인이 공동체를 이뤄 지내고 있다. 제조·농장·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재난지원금에 이어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주요 복지 정책에서는 또다시 제외됐다. 지금 기준이 ‘주민등록상 내국인’으로 설정됐던 탓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에 일부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 등)은 예외를 뒀지만, F-4(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고려인 대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광주 고려인마을 체류자 중 약 3700명이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있어 지원에서 제외됐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가졌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을 ‘재외동포’로 규정한다. 시행령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의 3세대까지를 동포로 인정하고, 2019년 일부 4세대까지로 확대



지난 2023년 광주 광산구 흥범도공원에서 열린 ‘제11회 고려인의 날’ 행사에 주민들이 전통 춤을 추며 즐기고 있다.

했다. 그러나 이후 세대는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거나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입국한 고려인의 경우, 동포 자격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어렵게 동포 비자를 취득해도, 주민등록이 없으면 건강보험·현금성 복지, 투표권 등 정치적 권리 등에서는 여전히 배제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 복지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내 동포 정책 학술포럼’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도 중요한 정책 대상”

이라며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에서 소외됐던 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내 체류 동포를 공식적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 실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적’보다 ‘실질 주민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은재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부대표는 “현행 재외동포법은 해외 체류 동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국내 거주 동포를 위한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적이 나 혈통보다 지역사회 내 역할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수혜 자격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락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대표도 “고려인은 역사적으로 강제 이주된 한민족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세금도 내는 실질적 시민”이라며 “정책적 배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재명 정부가 이 사안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충돌한다. 지난해 3월 현재는 난민 인정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방침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난민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고려인은 여전히 정책의 테두리 밖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의 책임도 작지 않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앞장

서 왔지만 국회와 중앙정부는 여전히 ‘동포의 자격’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2022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세대 제한과 국적 중심주의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해외 사례는 대조적이다. 독일은 동포를 ‘역사적 귀환자’로 보고 시민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귀환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해외 유대인을 국민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고 귀환권과 정착 지원을 제도화했다. 이들은 동포를 단순한 체류자가 아닌 실질적 국민으로 보고 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공식 청원을 제출했다. 협회는 “F-4 비자 소지 고려인을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 정신을 위반한 정책적 차별”이라며 “이반 소비쿠폰 문제는 단순한 복지 대상 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고려인은 수년간 국내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거주 고려인의 80% 이상이 동포 비자를 소지한 만큼, 최소한 이들은 정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법이 동포로 인정했다면 행정도 동포로 대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예외 허용 기준을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대한고려인협회가 제출한 청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자료 보안을 요청하고 검토 후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기준 재검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광주시, 폐지수집 어르신에 재활용품 선별 일자리 제공

광주광역시가 폭염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폭염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더위 안전 일자자인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무더위 시간대 ‘폐지 수집

금지시간’을 운영, 폭염 예방 효과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어르신들은 오는 8월 한 달 동안 폭염이 기승인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폐지 수집을 중단하고, 실내나 그늘 아래에서 환경정화 활동이나 재활용품 선별 등 비교적 안전하고 무리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상이 기자

도의회 상임위, 한센인 지원·관리 강화 조례안 통과

고령화하는 한센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남도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한센병 예방·치료, 새 환자 발견·검진, 교육, 홍보, 사회 복귀, 재활 등

한센인 지원 사업 전반을 확대하도록 했다.

사업 일부는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병용(여수5) 도의원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환자의 조기 발견과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전남도의 책무를 강화하고 평균 80.6세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한센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해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인들을 위로했다.

오지현 기자

